

# 『國民의 政府』 環境政策 推進方向

정진승\*

〈목 차〉

I. 새로운 環境戰略 必要性	1. 持續可能하고 環境親和的 發展 추구
II. 環境政策 推進與件	2. 汚染豫防 및 低減으로 快 適한 生活環境 造成
1. 自然·人口의 與件	3. 生態界의 自然的, 地域的 均衡性 維持·保全
2. 經濟的 與件	4. 環境正義 實現과 環境責任 確保
3. 政治·社會的 與件	5. 共同努力과 持續的 革新을  통한 環境挑戰 對應 강화
4. 國際的 與件	6. 環境科學技術 開發 및 環境 管理의 科學化
III. 現行 環境政策의 評價	
IV. 環境政策의 推進方向	
1. 2000년대를  향한  환경정책 의 새로운 패러다임	
2. 2000년대를  향한  環境政策 目標와 推進方向	
V. 環境政策의 主要 推進課題	VI. 結 論

## I. 새로운 環境戰略 必要性

현재 우리는 「成長의 20세기」 終焉과 「環境의 21세기」 到來를 맞이하고 있다. 20세기동안 인류사회는 역사상 경험하지 못했던 급속한 경제적 成長과 進歩를 이루어 냈지만 그 결과로 自然 破壞와 環境汚染이라는 또다른 문명사적 도전을 낳고 말았다. 즉 산업규모가 확대되고 소비생활이 향상되면서 오염물질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地球溫暖化, 酸性雨와 같이 국경을 넘는 환경오염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環境投資를 增大시키기는

\*환경부 차관

등 環境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이후 쾌적한 환경에 대한 國民의 欲求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91년부터 '96년까지 환경분야에 총 15조원(민간부문 포함)을 투자하였다. 그 결과 대기질, 폐기물관리 등의 환경질이 향상되고 있으나, 상수원의 수질은 국민들의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국민들의 體感汚染度 또한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반면, IMF 支援金融, 氣候變化協約 등 국내·외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향후 정부가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환경정책추진성과〉

	'91	'96
대기질 : SO <sub>2</sub> (ppm, 서울)	0.043	0.013
생활폐기물 관리 : 위생매립율(%)	27%	73%
하천수질 : 하수처리율(%)	33.0%	53%
상수원 수질 : 1등급 취수지역(%)	34%	46%

21세기에 환경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적 도전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經濟的 繁榮과 快適한 環境의 惠澤을 누릴 수 있는 持續可能的한 社會 建設을 위해서는 새로운 환경전략과 비전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탄생한 「國民의 政府」가 2000년대를 향해 추진할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環境政策 推進與件

### 1. 自然·人口의 與件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가용토지가 부족한 반면, 급속한 도시화로 首都圈과 大都市로의 人口集中이 심화되

고 있다. 특히 총인구의 48%가 서울과 6대도시에, 총인구의 4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적은 오염물질배출에도 환경적 영향이 크고 環境汚染源이 大都市地域에 편중되어 있어 대도시 주변의 환경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BOD부하량이 미국의 약 52배나 되어 환경여건이 취약한 현실이다.

## 2. 經濟的 興件

우리나라 경제는 총소비, 투자 그리고 무역증가율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최근 IMF 支援金融에 따라 앞으로 經濟·社會 全般에 큰 變化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정운동을 긴축적으로 바꾸고 기업구조조정이 확산되면서 단기적으로는 低成長, 物價上昇 그리고 失業率 上昇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環境政策 推進興件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원자재 수입가격과 유가가 인상되고 국민들의 근검절약의식이 확산되면서 資源의 效率的 利用과 再活用이 擴散되고 대도시 교통량이 줄어 대도시 주변의 大氣質이 改善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조정이 확산되면서 環境部門 投資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환경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環境管理 여건이 악화되면서 環境規制를 緩和시켜야 한다는 要求가 增大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政府의 環境投資도 전반적으로 減縮되어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많은 차질이 예상된다.

## 3. 政治·社會的 興件

'90년대 이후 民主化, 地方化가 확산되면서 쾌적한 삶에 대한 國民 欲求가 增加하였고 환경보전을 위한 地方自治團體, 企業 그리고 地域住民의 參與와 役割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開發과 保

쉴을 둘러싼 環境紛爭이 增加되고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지역주민들의 艱難현상으로 環境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낙동강 중·하류지역 주민간 갈등, 용화온천 개발과 관련하여 경북·충북도지역 주민간 갈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초로 여야간 정권교체에 의해 「國民의 政府」가 출범함에 따라 環境정책과 법규를 透明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쳐야 하는 등 環境關聯 制度改革에 대한 요구가 급속히 증대될 것이다.

#### 4. 國際的 與件

'96년 WTO체제가 출범된 후, 세계경제는 市場開放이 擴大되어 하나로 통합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無限競爭도 加速化되고 있다. 또 한편, 지구온난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호 등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國際環境規制와 환경보호를 위한 先進國의 貿易規制措置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CO<sub>2</sub> 등 溫室가스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석유화학, 화력발전 및 비철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製品 生産方式(PPMs)의 환경성을 고려한 무역규제가 도입될 경우 汚染多發 業種과 오염방지설비나 환경여건이 열악한 中小企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욱이 OECD 가입국으로서 環境政策 先進化 및 地球環境保護를 위한 적극적 參與와 役割에 대한 회원국의 요구가 증가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제품의 品質뿐 아니라 제품의 環境性, 生産過程의 環境親和性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정부 역시 환경질 개선과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環境親和的 産業構造 定着에 노력하지 않으면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다.

### Ⅲ. 現行 環境政策의 評價

그 동안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주요 관심사이며 깨끗한 공기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정책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실천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 동안의 환경정책의 한계를 살펴보면, 우선 대기, 수질 등 汚染媒體別 규제위주로 이루어져 환경오염을 根源的으로 解決하는데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指導·團束 등 직접규제수단을 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기업과 국민의 自發的 參與에 의한 效率的인 環境管理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오염물질을 事後에 處理하는데 치중하여 事前에 汚染을 豫防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 국토개발, 에너지 등 각종 경제정책 수립시 事前에 環境을 配慮하는 기능이 미흡하였다. 시화호의 경우처럼 주변 환경용량에 대한 배려없이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후일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환경정화에 더 많은 비용이 들수 있다. 정부가 기업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진해온 輕油·水資源에 대한 低價政策은 資源의 過消費를 조장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와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원생산성을 약화시켜 유가인상, 원자재 가격상승 등 외부 여건 변화에 취약한 산업구조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연환경보전, 물관리 등 환경행정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綜合적이고 體系的으로 환경관련업무를 遂行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政策의 一貫性과 效率性도 부족하였다.

넷째, 그 동안 지속적인 環境技術開發 및 環境인프라에 대한 投資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경기술개발 투자규모는 GNP대비 0.019%('96)로서 선진국의 0.03~0.05%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국내 환경질 개선과 국제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IV. 環境政策 推進方向

##### 1. 2000년대를 향한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재 環境政策의 限界를 극복하고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환경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기에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은 정책목표, 정책수단은 물론 경제와 환경에 대한 인식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 政策基調：環境・經濟의 對立・相衝	⇒ 環境・經濟의 調和・統合
◆ 重點目標：汚染物質 事後管理	⇒ 汚染의 事前豫防
◆ 政策焦點：供給管理 指向	⇒ 需要管理 指向
◆ 政策手段：硬直・規制・單一性	⇒ 柔軟・自律・多元性
◆ 接近方法：汚染媒體・個別企業別	⇒ 多媒體・産業別
◆ 推進方式：政府主導	⇒ 企業・國民 參與와 合意

##### 2. 2000년대를 향한 環境政策 目標와 推進方向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환경정책의 목표는 모든 生態界의 自然的 均衡이 위협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健康한 環境의 惠澤을 누릴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健康한 環境共同體를 具現하는데 있다. 또한 우리 후손이 최소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정도의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經濟的 繁榮, 環境質 그리고 社會的 衡平을 동시에 추구하는 持續可能한 社會를 건설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정부는 정부, 기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持續可能하고 環境親和的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시켜야 한다. 즉 정부는 人間 健康과 環境을 保護하며 삶의 質을 向上시킬 수 있는 發展戰略을 추진하고 持續可能한 방식으로 資源을 開發하고 利用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資源節約的이고 資源循環型인 社會體系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汚染을 豫防하고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健康과 環境危害를 最小化하여 快適한 生活環境에서 국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生態界의 自然的, 地域的 均衡性을 維持하고 保全함으로써 人間과 自然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共同體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環境正義를 實現시키고 環境責任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環境法規·政策이 국민 개개인에게 公平하게 適用되고 環境的 弱者가 配慮되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環境保護의 惠澤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社會構成員 모두가 環境을 保護하고 자신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環境的 結果에 責任을 지도록 環境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國內·外 여러 主體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環境保護와 持續可能한 發展을 위해 共同努力하여야 한다. 특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방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常識(Common Sense)과 伸縮性(Flexibility)에 따라 環境政策과 制度를 개선하여 악화되는 環境여건 변화에 迅速하고 效率的으로 對應하여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環境技術開發과 環境管理 科學化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가장 적은 費用으로 環境危害를 最小化하고 世界環境市場에서 競爭할 수 있는 環境科學技術을 開發하여 국내 環境개선은 물론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環境과

무역의 연계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또한 正確한 資料, 體系的 科學에 근거한 環境政策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政策의 實效性과 信賴性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 V. 環境政策의 主要 推進課題

### 1. 持續可能하고 環境親和的 發展 추구

#### 1) 經濟發展과 環境保全의 調和·統合 도모

우선 정부는 經濟開發政策과 開發事業에 대한 環境性 考慮를 통합시킴으로써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및 「事前環境性評價」를 강화하고 개발사업의 總工事費에 環境保全費用을 計上하여 개발과정은 물론 개발사업의 입지선정단계부터 환경성이 고려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貿易自由化와 環境保全의 조화, 持續可能한 農業 추구, 環境親和的 租稅體系 지향 등을 통해 경제·사회분야의 활동에 환경적 고려를 통합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다. 持續可能한 發展指標를 개발하여 농업, 교통, 개발, 고용 등 경제·사회정책 모든 분야에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에 대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다. 환경보전과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오염자부담원칙을 강화하고 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하수도사용료 등 시장유인적 수단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과 환경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經濟親和的 環境政策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끝으로 민주화,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개발과 환경의 상충으로 인한 갈등의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 강화, 지역환경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간, 주민간 환경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 2) 水資源의 안정적 供給體系 구축 및 需要管理 강화

정부는 대규모댐 건설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에서 食水專用 소규모 댐 건설, 江邊濾過水 개발 등 취수원을 다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또한 수자원 공급과 수요를 조화시키는 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지향할 것이다.

특히, 水資源의 節約과 再利用을 확산시키기 위한 需要管理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水道料金を 생산원가 수준까지 現實化시켜 정부의 재정부담과 물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절수형 수도기와 중수도 설치를 확대하여 물 節約型 生活패턴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부처별로 구축되어 있는 지하수관리전산망을 통합하고 地下水保全區域을 확대하여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제한하고 효율적 지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3) 環境親和의 産業構造 및 企業經營 誘導

정부는 資源·에너지 집약적이며 汚染物質 多量排出産業 위주에서 科學·知識·技術 집약적이며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淸淨産業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環境親和企業의 지정범위를 제조업 및 대기업 중심에서 건설업·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環境마크 指定基準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이 환경성을 고려한 제품을 만들고 제품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배출을 줄여나가는 環境親和의 企業經營을 촉진시킬 것이다.

## 4) 資源節約的, 環境親和의 消費文化 定着

최근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국내 재활용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환율상승으로 최근 6개월간 수입펄프, 고철의 원화표시가격이 약 90% 상승되고 국내폐지가격도 약 40~50% 상승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再活用品 義務購買을 擴大하고 中古物品 交換과 알뜰市場을 活性化시켜 재활용품 수요기반을 조성하여 재활용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재활용품 가격변화·재고량 등에 대한 모니터링제 실시, 「再活用品販賣支援센터」설치 및 확대 등을 통해 再活用品의 需給安定을 도모하고 재활용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再活用産業의 競爭力도 높여나갈 것이다. 특히 廢棄物 統合再活用體系를 도입하여 제품생산자에게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회수·재활용에 대한 직접적 책무를 부여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사용절감과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經乘用車 普及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타기, 공회전 줄이기 등 교통이용문화 개선으로 環境親和的 交通文化 定着에 노력할 것이다.

## 2. 汚染豫防 및 低減으로 快適한 生活環境 造成

### 1) 事前豫防의 環境管理 強化

현재 국내에는 약 35,000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200종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유독물 저장, 보관, 수송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新物質에 대한 環境危害性評價를 강화하는 등 事前豫防的 環境管理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環境排出量 報告制(TRI)」를 실시하여 사업자가 환경에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파악·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事業者의 自發的인 排出低減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오존警報地域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보확률의 정확성을 높여 여름철에 호흡기질환 등을 초래하는 오존오염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 2) 汚染物質 低減 및 管理基盤 構築

먼저 정부는 오염물질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오염물질 처리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기준, 배출허용기준 등 環境規制基準을 段階的으로 強化시킬 것이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環境基礎施設을 擴充하여 오염물질 처리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오염물질배출량을 규제하는 總量管理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사전에 오염을 예방하고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둘째, 特定大氣有害物質에 벤젠, 톨루엔 등 항목을 단계적으로 추가하고 다이옥신 등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 NOx, VOC, 다이옥신 등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시킬 것이다.

셋째, 자동차 증가 등에 따른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製作車의 排出許容基準과 燃料品質基準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총자동차대수의 29%('97)에 불과하면서도 오염물질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輕油車의 排出許容基準을 유럽수준까지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벤젠, 방향족화합물 등의 자동차 연료품질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대도시 자동차에 대한 淸淨燃料의 使用 확대, 청정연료 사용지역과 의무사용 대상시설 확대를 통해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적극 노력할 것이다.

넷째, 地域別·流域別·湖沼別 水質管理를 강화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물금 등 2급수를 초과하는 상수원 취수지점 상류지역을 「重點水質改善地域」으로 지정하여 지역내 오염원을 總量적으로 管理하고 하천구간별 目標水質 基準을 再調整하여 유역별 수질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上水源湖沼의 수질관리를 위해 낚시와 가두리 양식장 운영을 제한하고 시화호 등 干拓造成湖沼에 대한 수질개선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섯째, 減量化 優秀事業場 지정을 확대하고 從量制 適用對象 일반폐기물 발생사업장(1일 300kg이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家電製品의 包裝用 緩衝材의 減量義務도 強化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집단급식소 등 飲食物쓰레기 減量義務化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쓰레기 公共資源化施設을 擴充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따른 환경개선은 물론 수입농산물 감소에 따른 외화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다.

### 3. 生態界의 自然的, 地域的 均衡性 維持·保全

#### 1) 地域生態界 保全 強化 및 毀損된 生態界 復元

정부는 연차적으로 生態系保全地域을 확대하여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인 습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濕地保全法 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非武裝地帶의 自然生態系公園 조성 등 생태계 원형이 잘 보전되어 있는 接境地域에 대한 保全·管理對策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조성하여 백두대간 등 생태계 단절지역을 복원하고 폐금속광산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실시 등 汚染土壤復元事業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친숙공간 조성을 위해 自然型 河川整備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空間造成技術을 중점적으로 개발 보급할 것이다.

#### 2) 生物種의 體系的 保全 및 資産化

현재 논의되고 있는 「生命工學安定性議定書」가 '98년 하반기에 채택될 경우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적 규제와 생물자원주권주의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생물자원주권주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국내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을 위해 生物多樣性保全 國家戰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國立生物資源保存館 설립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포획 등으로 감소추세 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며, 유입종에 대한 국내 유입심사를 강화하고 황소개구리 등 生態界危害 外來動·植物의 退治事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태계 위해 生物種의 安全管理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 3) 保存爲主의 公園管理基盤 構築

자연훼손지 복구, 보호사업 확대, 자연자원조사 등을 통해 공원 자원을 보호하고 國立公園 事前豫約制 도입, 自然休息年制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公園資源의 보존과 親自然的 探訪秩序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를 축소하고 자연보전지구를 확대하는 등 保存爲主의 公園管理를 지향하고 국립공원구역 및 공원계획을 재정비하여 공원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 4) 海洋環境 保畧을 통한 제2의 國土 造成

해양생태계 보전을 통해 해양을 제2의 국토로 만들기 위해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特別管理海域 指定을 확대하고 적조상습발생지역, 汚染優甚海域에 대한 정화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이상 유조선은 전용항로 통행을 의무화하고 해양오염 방제장비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4. 環境正義 實現과 環境責任 確保

먼저 정부는 環境政策 執行, 環境汚染 등으로 인한 被害住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住民被害報償制度를 도입하여 上水源保護地域, 環境基礎施設 周邊地域 및 生態界保畧地域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상수원 보호지역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어로행위 등을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도서지역, 농어촌지역의 상·하수도 보급 등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둘째, 環境汚染 防止施設 設置 資金 지원을 확대하여 환경관리 능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환경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특히 환경관리 취약기업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 대학 등 전문가로 합동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술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셋째, 環境汚染 監視體系 강화 등을 통해 環境責任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환경오염·파괴 행위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不法捕獲·採取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문 제업소와 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더욱 강화하 되,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技術支援과 啓導위주로 사업장 관리를 전환하여 환경기준 준수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經濟的 誘引制度(배출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등)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汚染者負擔原則에 따라 개별 주체들이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다.

넷째, 國民의 環境情報에 대한 接近性을 높이고 政策過程에 參與를 保障함으로써 민주적 원리에 입각한 환경행정을 펴나갈 것이다. 즉 環境情報를 公開하여 國民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 利害關係者(stakeholder)의 參與를 擴大하여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특히 새로운 환경정책과 기준을 도입시 「事前豫告制」를 도입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 5. 共同努力과 持續的 革新을 통한 環境挑戰 對應 강화

### 1) 協力的 關係에 기반한 環境保全 追求

첫째, 교통, 에너지, 국토개발, 농업, 레크레이션,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와 환경부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스스로 정책결정, 정부조달, 시설관리 및 정부운영상 환경성과를 증진시키는 Green Government를 지향할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地域環境計劃」을 수립하고 地域環境基準을 설정하도록 유도하여 地方中心의 環境管理體系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環境管理示範地自體指定制度」를 活性化하여 성공적인 지역환경관리 모델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기업·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정부와 기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環境政策協議會」를 운영하여 환경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市場에서 손쉽게 利用될 수 있는 환경기술 개발에 政府와 產業界가 공동으로 協力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민간환경단체, 시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 의한 자율환경감시체계를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2) 環境外交 및 國際環境協力 확대·강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同伴者的 協力關係를 구축해 국제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특히 동북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兩者 및 多者間 協力을 강화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南北環境協力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기후변화 등 國際環境規制 움직임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업무분담체계, 협의기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汎政府的인 지구환경 보전전략을 수립·추진할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에 대비하여 각 부처의 분야별 세부대책을 총괄·조정하는 “地球溫暖化防止綜合對策” 수립·추진할 것이다. 또한 「地球環境研究센터」를 設置하여 지구환경문제와 국제환경협력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을 위한 Think Tank로서 활용할 것이다.

## 3) 環境關聯制度的 合理的 改善

첫째, 환경부내에 「規制審査分析班」을 構成하여 각종 환경규제 사무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환경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과다한 시설투자를 초래하거나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環境施策 및 基準은 재검토하여 추진시기와 우선순위를 合理的으로 再調整할 것이다.

둘째, 規制中心 環境管理에서 탈피하여 산업체가 환경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는 「自律的 環境管理體系」를 단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산업적 특성과 환경상태가 유사한 업종별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여 자율 추진토록 하는

업종별 자율환경관리방식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셋째, 環境基礎施設 設置 등 環境分野에 대한 民間參與를 活性化시킬 것이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民間參與를 促進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부담도 완화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 경영능력이 요구되는 환경신기술평가, 자동차 성능검사 등에 대한 民間委託도 점차 확대할 것이다.

## 6. 環境科學技術 開發 및 環境管理의 科學化

### 1) 需要者 中心의 環境科學技術開發 추진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環境技術開發 長期綜合計劃」을 수립하여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급자 중심에서 기업 등 需要者 中心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實用化·商品化 위주의 기술, 汚染豫防技術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국내개발 環境新技術에 대한 優秀性(현장적용성, 경제성 등)을 評價하여 국가가 공인함으로써 산업체 등 기술수요자가 신뢰하고 신속히 채택할 수 있도록 우수 신기술 보급과 지원을 위한 環境新技術評價센터를 설치·운영해 나갈 것이다.

### 2) 環境政策 推進基盤의 科學化

정부는 최선의 科學과 유용한 資料에 根據하여 환경정책이 수립·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4대강 유역에 대한 環境基礎調查, 自然環境全國基礎調查를 실시하여 유역별 수질관리체계 및 자연생태계의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특히 場所에 基礎한 (place-based) 政策決定을 위해 遠隔探查와 地理情報시스템도 적극 활용할 것이다.

또한 수질, 대기 등 環境測定網을 擴充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환경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환경모니터링, 인간건강과 생태계에 대한 위험성 평가방법 개발 등을 통해 生態界에 대한 科學的 管理 강화해 나갈 것이다.



## VI. 結 論

세계는 지금 시장개방과 무역자유화의 흐름속에서 자본, 기술, 상품 및 서비스가 국가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고 세계의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환경문제도 국경을 초월해 전지구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정책뿐 아니라 환경정책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IMF 지원금융과 기후변화협약의 충격은 우리에게 경제적 위기뿐 아니라 환경적인 면에서 큰 시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적응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경제활성화와 환경보전 목표는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고 환경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은 자원이용과 생산의 비능률을 제거하고 제품생산의 전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영향을 줄이면서도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경영전략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 모두도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과소비와 허례허식을 추방하여 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